



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, 헌정사상 첫 부결

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난 9월 11일 부결됐다.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으로,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.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,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, 찬성 145명, 반대 145명, 기권 1명, 무효 2명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.

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했다.

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사퇴 이후 8개월간의 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현재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. 문재인 대통령도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다시 착수하게 됐다.

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, 국회는 6월 7,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마쳤다. 하지만 다른 공직후보자 인사 문제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과 연계해 반대하는 야당에 밀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속절 없이 표류했다. 정기국회를 앞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,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 등으로 또다시 연기됐다. 더구나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옹호 판결을 내렸다는 과장된 주장을 내세워 각 당 의원들에게 반대 압박 문자를 보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꼬였다.

이날도 오전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처리는 불투명했다.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가졌으나 보수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. 하지만 숙고에 들어간 정 의장이 이날 정오쯤 “정당들의 (표결 연기) 요청을 언제까지 들어줄 수 없는 일”이라며 “김 후보자 (임명동의안 처리를) 더 미룰 사유가 없다”고 직권상정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안건은 최종 부결처리 됐다. 이에 따라 110일 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끌고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책임론과 부결표에 상당수가 가세한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.